

박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대치정국 분수령

국가기관 대선개입·국정원 개혁 등 발언내용에 관심

대정부질문·감사원장 인준·대화록 공방 등 ‘점점산중’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앞으로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그 내용에 따라 교착 상태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입에 쏠린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8일 예정된 시정연설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원상 특검’ 도입 요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회견회에서 “사초 폐기

문제 등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자리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 문제에 대해 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입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야당의 대어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대치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정치 분야를 필두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총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대선개입 의혹,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일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연계한 데 따른 여야간 충돌도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미 동의안 상정 법정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에 맞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 및 외국출장 자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에는 벌써 전원이 감돌고 있다.

만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시 장외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대결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백합꽃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특위 수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야권 ‘국민동행’ 발족

창립대회 “민주주의 회복·한반도 평화” 선언

법야권 정치원로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한 법국민운동기구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동행은 이날 오후 원불교 서울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창립 선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포용하는 정치,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왔다면 대통령과 여야의 약속은 정과 간 대결 속에서 실종돼 버렸다”며 “민주주의 신장, 경제민주화 및 민생복지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80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국민동행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도갑·정대철 민주당 상

임고문, 인명진 목사,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총재,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반재철 홍사단 이사장, 영담스님, 김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9명의 공동대표단을 선출했다.

김덕룡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념적 갈등과 여야의 대결밖에 없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동행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집착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도 창립대회에 참석해 국민동행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반(反) 박근혜’ 전선을 부각하며 야권의 결집을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추사에서 “오만과 독선, 거짓과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살려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동행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삶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 다음 정권 탈취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여러분의 동행이 품은 고귀한 뜻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동행’에 안 의원의 우호세력이 다수 포함돼 있어 양측간 연대설이 나오는 가운데 안 의원은 행사에 앞서 국민동행 대표단과 15분가량 비공개로 환담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청권 의원들 내일 회동 지역구 증설 모색

민주 “전국 모든 선거구 검토 필요”

여야 총청권 의원들이 19일 회동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 증설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7일 총청권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구와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과 상의를 거쳐 이날 자리를 마련했으며 양당의 총청남북도당위원장과 대전시당 위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새누리당과 민

주당이 따로 의석수 조정을 검토하다 보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총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현재 자문기구인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20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조정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당의 접근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근거로 호남과의 인구비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 모든 선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내 ‘선진화법 내홍’ 조짐

법제정 주도 소장과 의원 집단 반발

황우여·최경환 ‘투톱’ 갈등 양상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홍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60% 이상 동의’를 강제화한 선진화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자 당내 일부 의원들이 15일 이 같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성안과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남경필·정병국·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처리라도 해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며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한 극한 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률안과 예산안은 여당이나 야당의 당락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과 절차의 무력화를 공언하는 행동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회견에는 이외에도 이명수·황영철·홍일표·권은희·김동완·박인숙·이종훈·이이재·김상민·이상일·이운룡·이재영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의 주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원내지도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작년 선진화법 통과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처리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도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것으로 알려져 당내 ‘투톱’간 갈등 양상마저 노출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법 개정 추진은 물론 필요시 헌법재판소에 위한 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진보당 “왜곡·조작, 국정원 책임져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모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외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총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현재 자문기구인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20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조정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당의 접근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근거로 호남과의 인구비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 모든 선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문씨는 이를 포함한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녀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만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문씨를 몰아붙였지만 그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질이 좋지 않아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전문가도 없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의 아이없는 시스템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녹취록 작성 오류와 유출로 인한 결과에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진상조사와 내부감찰을 요구했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급매”

14평-2세대 (14,16층)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무등산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1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5000만원 정도
- 매매가 - 3300만원

29평-3세대 (10,12,13층)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광주공원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2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1억원 정도
- 매매가 - 6500만원

53평-2세대 (9,13층)

-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전망 좋음)
- 광주공원과 양동시장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3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2억 1천만원 정도
- 매매가 - 1억 3500만원

77평-2세대 (20층)

- 사무실 전용 (최상층, 전망 최고)
- 광주공원과 양동시장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5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3억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2억 7천만원

회사 사정상 싸게 정리합니다. 문의 H. 010-4667-9300